6·10항쟁 17주년
기념 토론회

87년 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사회 : 안 병 욱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발표 : 김 상 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조 현 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토론 : 김 기 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 명 호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송 영 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 대 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 현 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때 : 2004년 6월 10일 늦은 2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6월항쟁17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7 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한국민주화의 진로
- '보수적 민주화'를 넘어서 -

김 상 곤(한신대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87 항쟁의 현재적 의의
3. 87 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민주적 발전과정
 1) 신군부권위주의기의 사회운동
 2) 카리스마적 민간권위주의기(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사회운동
 3) 사회운동의 이념적 발전
4. 87 항쟁 이후의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5.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1) 참여정부의 성격과 시대적 역할
 2)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과제

1. 머리말

노무현 정권은 여타 정권과는 달리 취임 1년만에 2기를 맞았다. 이 구분은 언론이 부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도 이 구분을 자기정체화하여 지난 1년과 지금부터를 달리 규정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주의를 반민중적으로 선보인 현 정부가 국민의 힘으로 탄핵정국을 돌파하여 형성한 여대야소 정국 하에서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는 지금부터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바라는 한편, 별로 기대와 신뢰를 크게 하지도 못하는 묘한 이원성을 갖고

있으며 이번의 6·5지방선거에서 그 일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국의 사회운동[1]은 시민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 진보, 희망을 키워왔고 그 활동성과 투쟁성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괄목할만한 정도이다. 이는 진보적인 이념과 헌신적인 실천 활동가, 적극적인 전략 전술가들의 합작과 연대의 결과이다. 우리 사회는 87 항쟁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이 급속도로 분화 발전되었으며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는 종래의 사회운동 개념의 스펙트럼과 다양성이 확장되었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자율적으로 기치를 내걸고 사회와 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크게는 해방 이후 지배권력과 총자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비롯되지만 가깝게는 군사반란, 내란과 광주학살로 권력을 탈취하여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정경유착적인 수탈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그리고 투쟁적 운동성은 5월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저항과 해방정신의 맥이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6월 민주항쟁의 17주년을 맞는 오늘은 87년의 6월 민주항쟁과 7~9월의 노동자대투쟁을 '87항쟁'으로 규정하여 기념하며 그 현대적 의의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본다. 작년의 16주년 기념토론회 때 '87항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민중단체를 포함한 사회운동진영에서 17주년 기념토론회를 기획 논의하면서 87년 항쟁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된 것 같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사용 차원이 아니라 5월 항쟁의 맥을 이은 87년의 두 항쟁을 하나의 국민항쟁으로 승화시키는 의미이자 시민사회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의 흐름이 하나에 맥을 닿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80년대의 변혁운동 이래 분화 발전되어 온 두 운동이 서로의 접점을 확인하고 21세기적 연대와 결합의 지점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87항쟁의 현재적 의의를 살펴보고 87년 이후 사회운동의 발전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진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이 글에서 사회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삼는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운동, 비정부운동, 신사회운동 등을 통칭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일반민주주의 이상을 지향하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주요 범주로 한다. 민중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서민운동 등 대중적 계급운동과 전선운동, 진보적 지식인 운동 등을 통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을 포괄하는 범주로 한다.

2. 87 항쟁의 현재적 의의

우리 현대사에는 4월 혁명, 5월 항쟁, 그리고 87 항쟁이라는 자랑스런 국민항쟁의 역사가 있다. 이 국민항쟁은 역사적으로는 동학혁명과 3·1운동이라는 민족운동의 전통위에 서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이 자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근대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1960년 4월 혁명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전통의 시원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할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속성을 드러내며 민중적인 저항정치의 전형을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87 항쟁으로 그 큰 맥을 잇게 한 계기적 사건이다. 그런가하면 87년의 민주민중항쟁은 우리사회의 본격적인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한 것이었다. 5월 항쟁을 직접 계승한 87 항쟁은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민중운동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서 수십년을 이어온 군부독재의 후퇴를 강요하는 역사적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민중적 단결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80년대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든 계기이자 87 항쟁의 앞선 맥인 5월 항쟁을 먼저 살펴보고 87항쟁의 의의를 몇 가지로 짚어보고자 한다.

1980년 5·17내란은 대중적인 민주화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었으며 민중을 수탈하는 축적체제, 및 그에 조응하는 독재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유신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군사쿠데타에 대응하여 일어난 광주민주항쟁은 이러한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재편음모에 대한 거부였으며 당시 사회의 모순구조가 특히 응집되어 있던 이 지역에서 폭발한 것이었다. 항쟁은 1980년 5월 어느 특정지역에서 돌출한 사건이 아니라 좁게는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노동자 생존권 투쟁, 부마항쟁, 그리고 80년 봄의 사북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와 시민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 생존권적 요구에 바탕을 둔 투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지역 모순조차도 전체적인 모순구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분명하다.[2] 다른 지역보다도 강하고 오랜 민족운동의 전통을 가진 호남지역은 당대의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인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철저히 갖춘 곳이었다.[3]

---

2) 김상곤(1996) 참조.

3) 이지역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 성장과정에서도 착취당하고 소외된 우리 민중일반의 특징을 가진 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별로 인한 차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 출신 정치가에 대한 기대를 통해 이를 왜곡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었던 이 지역 민중들은 다른지역의

이처럼 5월 항쟁은 학생 시위에 대한 단순한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모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5월 항쟁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참다운 민주주의의 확립, 둘째 민족생존권의 확보, 셋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소외와 불평 등을 제거하는 민중해방의 실현이다. 항쟁의 진전과정은 이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시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5월 민중항쟁은 이 세 가지 목표들이 연쇄적으로 결합하여 폭발적인 힘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이었다.[4)]

결국 5월 항쟁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민중생존권 투쟁의 연장에 있었던 것으로서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성장한 모순구조와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기층민중이 주체가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중해방을 지향하였던 민중항쟁이었다. 이 항쟁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5월 항쟁은 이후 민중운동을 성숙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날 이후 모든 민주민중세력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고민하고 그날을 계기로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난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계급적 민족적 제 모순이 중첩된 한국사회, 재벌형 독점자본과 반민주적 독재정권,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외세로 구성되는 지배세력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민중수탈적 구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제는 결코 기층민중운동과 분리되어서는 사고될 수 없다는 것이 확보되었으며, 그동안의 급속한 축적에 따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비약적인 확장으로 토대가 확보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의 역사적 지위가 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변혁지향적 민중운동이 80년대에 구축된다. 생존권적 차원의 민주노조운동에 뿌리를 둔 노동운동에서도 변혁지향적 흐름이 강화되며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어간 학생운동에서도 한국사회의 전망에 관한 본격적인 지향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항쟁의 경험은 또한 70년대의 사회운동이 회피해온 문제였던 반미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때 비로소 극복되었다. 이상의 정리에 입각하여 이제 광주항쟁이 우리 현대사에서 갖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째, 5월 민중항쟁은 이후 민중운동을 성숙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날 이후

민중들과는 달리 대통령 직선제를 골간으로하는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전남지역 학생들의 80년 5월의 민주화 투쟁이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지역사회 민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4) 전남사회운동연구소편(1988) p.262.

모든 민중민주세력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고민하고 그날을 계기로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난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급적 민족적 제모순이 중첩된 한국사회, 독점자본과 반민주적 독재정권,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외세로 구성되는 지배세력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민중수탈적 구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제는 결코 기층민중운동과 분리되어서는 사고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었으며, 그동안의 급속한 축적에 따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비약적인 확장으로 토대가 확보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의 역사적 지위가 분명하게 되었다.

둘째,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변혁지향적 민중운동이 80년대에 구축된다는 점이다. 생존권적 차원의 민주노조운동에 뿌리를 둔 노동운동에서도 변혁지향적 흐름이 강화되며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어간 학생운동에서도 한국사회의 전망에 관한 본격적인 지향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항쟁의 경험은 또한 70년대의 사회운동이 회피해온 문제였던 반미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때 비로소 극복되었다.

셋째, 5월 항쟁은 민중 일반이 투쟁에 동참함으로써만이 민중억압적인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1987년 민주항쟁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전국민적인 반독재투쟁을 통해 군부독재의 종식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얻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5월 항쟁은 우리가 발전시켜야할 것들의 단초를 제시하였을 뿐 그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던 것도 물론이다. 80년대 이후의 사회운동은 이 단초를 토대로 해서 진보된 사회가 갖추어야 할 것을 투쟁을 통해 발견하고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넷째, 5월 항쟁을 통해 우리는 통일된 자주국가에 대한 열망을 비로소 키울 수 있었다. 5월 항쟁은 민족사의 민중운동을 계승하는데 현대적인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5]

12.12군사반란, 5.17내란 그리고 광주학살로 권력을 탈취하여 성립된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극우주의적인 이념아래 파시즘적 권

5) 한편 5월 항쟁에 대한 해석은 진보진영 내에서도 항쟁의 배경이나 조건, 혹은 무장봉기에 대한 평가, 민중권력의 문제, 주도계급과 지도노선, 미국의 역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논쟁 속에서 해소되기 보다는 실천 속에서 민중적 과제를 얼마나 전사회적 과제로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의해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위주의 철권통치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은 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목숨을 건 투쟁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4.13호헌조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가 크게 미쳐 중복과잉투자문제가 부각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시작되었다. 중복과잉투자해소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개방과 정부의 개입축소 등의 경영자율화가 정책으로 입안되었다. 초기의 철권통치 후에 사회문화적 유화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에 대한 탄압은 80년의 노동법개악과 국가보안법체제 강화로 악랄하게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대처정권의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레이건 정권의 공급중시의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5월 항쟁 이후 신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을 필두로 한 사회운동은 변혁운동과 사회민주화 투쟁에 헌신적으로 복무하였다. 7년간 신군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자 투쟁해온 성과들이 축적되어 87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이제 그로부터 17년, 사회운동도 크게 분화 발전되고 사회의 민주화도 많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풀어가고 진전시켜야 할 과제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패권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위험을 안고 있는 한반도, 수구와 보수의 총출동 등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와 자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물론 정치권력이 이러한 정세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바람대로 될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이 이 모든 정세를 온몸으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운동세력이 대치선을 치고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87 항쟁의 현재적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87년은 80년 5월의 대학살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시달린 민중의 분노와 사회적 모순이 누적된 시기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시작된 87년은 막바지에 몰린 권력이 4.13 호헌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각계각층의 호헌철폐선언과 투쟁선포가 국민운동을 만들어내고 산업 현장의 대투쟁을 폭발시켰다. 87 항쟁은 좁게는 6월부터 9월까지의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87년까지의 변혁운동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87년 초부터 조성된 정세를 돌파해 나가는 일련의 항쟁과정을 총괄한다. 이 일련의

항쟁 결과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이 이룩되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조운동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둘째, 87 항쟁은 4월 혁명과 5월 민중항쟁의 민주와 변혁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으며 이후의 사회운동의 중간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6월 민주항쟁시 직접적인 슬로건은 직선제 쟁취를 비롯한 반독재 민주화였으며 이 항쟁에는 반외세자주화, 반재벌민주화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 대투쟁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노동조합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셋째, 87 항쟁은 5월 민중항쟁이 뿌린 민주, 자주, 변혁, 해방의 정신을 전국적이고 계급망라적으로 확산시킨, 즉 5월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혁명이 학생운동 중심이었고, 5월 민중항쟁은 대표적인 지역 민중이 주도하였다면, 87 항쟁은 시민, 학생, 사무직 노동자, 현장노동자, 지식인, 재야운동세력 모두가 함께 이룩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넷째, 87 항쟁은 이후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동원(同源)으로서 두 운동의 분화 발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물론 87 항쟁을 구성하는 두 사건의 성격과 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사건의 앞선 정신과 흐름이 큰 물줄기를 이루었었고 민주, 자주,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인간과 노동 해방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87 항쟁을 계기로 시민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사회개혁을 담당할 새로운 시민운동체들이 조직되고 민중적인 가치를 담지할 진보적인 민중운동체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한단계 진전시켰다.

다섯째, 87 항쟁은 모든 사회운동세력이 함께 되새기고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공동계승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태생적인 자양분을 민중운동에서 받아왔으며 민중운동은 추동의 활력소를 시민운동에서 취하면서 양자는 상호침투하고 있다. 지금은 시민운동이 더욱 진보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민중운동은 더욱 대중화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통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87 항쟁으로의 통합적인 계승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3. 87 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민주적 발전과정[6)]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세 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 사회는 근대적인 모순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근대적인 잔재도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7)]. 따라서 사회구성 자체도 다분히 중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적인 전근대성을 다분히 보유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은 이 점을 해소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활용하여 권력과 자본의 재생산에 활용해 오고 있다. 권력은 파시즘화, 권위주의화하고 자본은 독점화, 천민화, 정실화해왔다. 중첩되어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극복은 온전히 민중과 시민의 몫으로 되어왔으며 국민대중은 이 몫을 수행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뒤범벅된 희생, 헌신, 봉사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감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90년대를 지나면서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멀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연과 함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과정이 희망과 기대의 길이라고 믿는 실천가들이 모두 함께 하는 한 그 길은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것도 같다.

먼저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을 구분짓기 위해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역사발전과 민주주의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발전개념을 바탕에 두고 민주주의의 실천적 발전과정을 절차적 민주주의 - 내용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민주화 3단계로 규정하고자 한다. 1단계는 3권 분립과 주권재민 사상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내용적 민주주의는 3단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수준의 민주주의 즉 절차수준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내용적 담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3단계는 무차별, 무속박, 무억압, 무격차가 삶 속에서 관철되는 높은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1단계가 최소 요구 강령의 수준이라 한다면 3단계는 최대 강령에 접근하는 수준이며 이 후 노동해방, 빈민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본질적인 수준으로 차원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주화 단계를 사회운동 발전과 대비시키면 민주화 1단계에서는 사회운동이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균형자로 역할

6) 김상곤(2003) 참조.

7) 이러한 중첩성으로 인해 사회에 만연하는 현상은 천민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 파시즘, 권위주의, 보스주의, 남성중심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학연주의, 정실주의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발목잡고 사회운동의 역동성도 저해하고 있다.

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사회운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심 동력이 되는 단계일 것이다. 3단계는 사회운동이 사회와 구조적 실질적 통일체가 되는 단계로서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는 해방운동으로 일체화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것이다.

1) 신군부권위주의기의 사회운동

이 단계는 사회운동 특히 민중운동진영이 군부파시즘적 총자본의 지배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던 시기이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한 신군부의 정권찬탈 작전인 5.17내란에 대한 광주민중항쟁이 이 준비단계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 대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변혁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정투쟁,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보장투쟁, 도시빈민들의 생존권투쟁,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언론개혁운동, 교수와 지식인들의 정치사회적 민주화운동, 교사들의 교육운동 등이 정권을 압박하고 퇴진을 요구하였다. 한편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남녀불평등문제가 사회의 반민주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 아래 당시까지의 보수적 여성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평을 열기 시작했다. 누적된 모순과 축적된 민주화 역량이 결합하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호헌조치에 대해 종교인, 교수, 사회운동가들이 저항의 흐름을 만들고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가 투쟁의 중심을 이루어 6.29선언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수립되자마자 전두환 전정권에 대한 심판을 사회운동으로부터 강력하고 요구받고 청문회란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정권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을 하고 권력장악과정의 부당성, 폭력성, 반란성을 낮은 수준에서나마 공식화하게 되었다.

6월 항쟁에 이어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현장투쟁이 노동자대투쟁으로 모아지고 이것이 현장민주화투쟁과 민주노조건설투쟁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노동조합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남성중심의 대사업장에서 흐름을 주도한 민주노조운동은 최초의 민주노조 연맹체인 전노협을 출범시키고 권력(3당합당)과 자본(자본가 단체의 연합)을 긴장시키며 이후 민중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87 항쟁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대항세력의 조직적 결집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야별 시민운동단체와 부문별 대중단체의 건설이 잇달았다.

이 시기에는 한총련 대학생들과 통일운동가들이 본격적인 저항적 통일운동을 범민족대회로 모으면서 펼치기 시작하고 변호사, 의사, 약사, 치과의사, 연구진 등의 중간층이 사회운동의 분야별 역할을 담지하고 나서며 새로운 종합적 시민운동체인 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시민운동은 6월항쟁과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우리

사회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며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을 개척하여 담당하였으며 이는 서구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시민운동이 재활성화되는 것과 일면 궤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선운동의 새로운 결집체인 전민련이 89년에 출범하고 90년 보수대연합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계급대중조직의 전선체인 국민연합이 90년에 결성되어 정파와 대상이 다른 전선체가 양립하게 되었다. 이후 이 양 전선체는 전국연합으로 통합되어 반파시즘공안정국분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을 선도하였다.

이 준비단계의 민중운동의 성격은 변혁적 반파시즘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전기는 대중적민주화운동의 조직화기, 후기는 계급적 대중조직의 건설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성격은 저항적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전기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태동기, 후기는 시민사회의 조직화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전체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가 탐색되고 조직적으로 분립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양 운동진영이 사안별로 부분적 연대를 아주 낮은 수준에서 모색한 시기이기도 하다.

2) 카리스마적 민간권위주의기(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사회운동

3당합당과 이면합의를 통해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장악한 문민정부는 사정정국과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출발하였으며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부정부패청산과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고 군부개혁, 금융개혁, 신경제개혁 등을 추진하였으나 개혁의 이념과 지향성부터 사회운동의 그것과 차이를 드러냈다. 초기에는 사회운동일반이 상당한 밀월기간을 가졌지만 김영삼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신자유주의적 신경제개혁의 반노동자성이 이 밀월을 깨뜨리게 되었다. 신경제, 신노사관계에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세계화와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체결에는 반세계화운동과 농업농민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과거청산과 악법개폐를 요구하는 국민적 사회운동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지배집단은 오히려 이승만 영웅화 작업과 박정희 되살리기 사업을 획책하였다. 기층민중들의 생존권 쟁취운동이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 치열해졌으며 전노협, 대공장노조회의, 사무직노조 연대회의 등이 총단결하여 출범시킨 민주노총이 전체 사회운동의 전위로서 자기역할을 담지하게 되었다. 진보적 종합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가 창립되어 민중운동과의 연대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진보적 인권운동, 전향적 환경운동, 본격적인 여성주의운동, 언론개혁운동, 통일운동, 지방자치운동이 전개되면서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총체적인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문민정부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검찰을 통해

묵살하려다가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95)로 결집된 시민, 민중, 지식인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분노에 찬 요구에 굴복하여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신군부를 단죄하였으며,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96년 연말에 날치기 통과하였다가 기층민중과 국민들의 분노로 일단 철회하는 상황도 있었다. 아무튼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사안별로 통합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 일정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IMF지배체제를 이겨나간다는 명분 아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민영화, 규제완화, 유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고용의 비정규직화, 공공성의 축소, 분배의 악화 등을 초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켰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은 미완에 그치고 대신 과거청산과 남북관계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연대해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및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잇달아 결성하여 저항운동을 강하게 하였다.

이 IMF반대 범국민운동 이후에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각각 별도로 연합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반대를 위한 전선체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을 결성하였다. 시민운동은 일부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지지 입장을 가지기도 하였고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층위 분화가 본격화하였으며 총선시민연대운동과 대선유권자연대운동으로 정치적 시민운동을 지평을 열기도 하였다. 시민운동은 높아진 위상과 확대된 역량을 총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의 종합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후기에 들어와서 사회운동은 연대와 공유작업을 한차원 높이게 된다. 2001년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탄압과 단병호위원장의 구속에 반대하여 288개 단체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9.11테러이후에는 700개 단체가 반전평화 시국선언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단체 정책협의회가 주요 시민, 민중단체들의 참여로 가동되었다. 2002년 발전, 철도, 가스 노조의 연대파업과 '연대와 성찰:사회포럼2002'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간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개혁에 대한 입장차이에 관해 접근토론을 시작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발전과 공공성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주요 시민, 민중단체들 15개가 모여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는 평화통일운동이 체제내화하여 폭넓게 펼쳐졌으며 6.15정상회담 이후 통일운동단체들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만들어 반전평화통일연대운동을 펴고 있다. 통일운동은 관변신설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로부터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등까지 그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2002년에는 전체 운동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몇가지 조짐을 보였다. 월드컵 기간 동안의 '붉은악마'로 상징되는 청년학생들의 새로운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문화, 노무현 정권을 창출하는 밑거름 역할을 한 새로운 정치선거운동의 전형을 세운 '노사모' 운동, 그리고 심미선, 신효순 양을 애도하고 미국의 공식사과와 소파재개정을 위해 11월 30일부터 연일 열린 '촛불시위' 운동 등은 2003년부터의 사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와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단계를 사회운동 시각에서 종합해보면 민중운동의 성격은 민주적 기본권, 생존권 쟁취운동이었으며 문민정부기가 민중운동조직의 재편기였다면 국민의 정부기는 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 실험기였다. 시민운동의 성격은 저항·개혁적 시민운동이었으며 전기가 시민운동의 분화다양화기였다면 후기는 시민운동의 개혁드라이브기였다고 본다. 사회운동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시민, 민중운동의 이념적 차별화기였으며 후기는 시민, 민중운동의 연대 조직화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전기가 사안별 통합적 연대기였다면 후기는 정책단위의 통합적 연대 실험기라고도 할 수 있다.

3) 사회운동의 이념적 발전

한국의 사회운동은 권력의 억압과 통제 아래 이념적인 면에서도 많은 제약과 탄압을 받아왔다. 분단의 상황에서 이념적인 통제를 가하는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의 법률과 각종 억압기구들이 끊임없이 사회운동과 그 세력을 옭아매어왔다. 그러나 사회운동세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파시즘적 권력, 형식적으로 민주화된 권위주의 권력 등을 상대로 그 이념적인 지평을 꾸준히 열어왔다. 특히 87항쟁 이후에는 시민운동의 이념이 다층적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민중운동은 70년대에는 파시즘적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반파시즘 재야운동을 펼쳤으며 민중주의적인 흐름도 상당히 유지되었다. 80년대에는 5월 민중항쟁의 영향과 전투적인 민중운동으로 사회변혁주의가 운동의 중심이념적 역할을 하였으며 진보주의와 개량주의가 분파화하였다. 90년대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제도화되고 시민운동의 성장의 영향을 받아 변혁이념의 실천화보다는 반권위주의적인 진보주의가 중심화하고 변혁주의와 개량주의가 공존하였다.

현대적인 시민운동은 70년대까지는 불모지이다시피 하였으며 애국적인 시민운동, 엘리트적 시민운동 등이 극우이념과 보수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80년대에는 시민적인 수준에서는 보수주의가 팽배하였지만 새롭게 생성되던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민중운동'주의적 시민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기고 개혁이 사회적 담론이 되면서 90년대의 시민운동은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급진주의적인 경향까지도 띠게 된다. 보수·극우주의적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합법화·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제 2000년대 사회운동의 이념적 경향을 보면 민중운동에서의 특징은 개량주의의 득세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경우에는 보혁구도가 빠르게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민중운동은 반자본주의적인 진보주의가 아직도 중심이념이지만 개량주의가 혁명주의보다 앞서서 민중운동의 양대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듯하다. 시민운동에서는 '개혁·급진주의 대 보수·극우주의'의 대립구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2003년의 3.1절 관련 행사, 한미관계(한미동맹), 북핵문제, 한국전쟁, 대통령 탄핵문제, 이라크파병, 미군감축 등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 집단행동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의 조직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운동의 핵심적 추세를 보면 70년대에는 반파시즘 재야운동, 80년대에는 민주변혁운동이었다면 90년대에는 급진적 개혁운동이 초점이었으며 2000년대에는 민주적 개혁운동으로 사회운동의 중심이 잡혀가는 듯하다

4. 87 항쟁 이후의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재야운동과 사회운동은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반합법전선체 중심론, 야당 강화론 또는 범민주연합당론(민주대연합론), 독자창당론 등의 경향들이 경합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87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실험되었다.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개혁정치(개혁적 보수정치)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정치의 흐름이었다. 여기에 시민운동세력의 정치운동도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적인 정치세력화는 재야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기존의 보수 정당의 개혁을 명분으로 편입되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며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로부터 구체화된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는 재야운동과 노동·민중운동 활동가들이 독자적인 정치조직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87항쟁 이후의 개혁적인 정치세력화 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 2월에 13대 대선에서 김대중후보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냈던 문동환, 이상수, 이해찬 등 97명이 평민당에 입당하여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를 구성한 것이다.(정기영, 김윤철 : 2003) 이들은 지역구 및 전국구에 23명이 출마하여 15명이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것은 재야운동세력의 합법적 정치활동의 시원을 기록하였지만 평민연이 표방하였던 정당정치의 개혁은 보스중심의 파당적 보수정치에 빨려들어간 결과를 낳았다.

둘째, 13대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운동에 동참한 일부가 경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추진협의회와 결합하여 88년 3월에 한겨레민주당(한겨레당)을 창당하였다. 13대 총선에 나가 1명이 당선되었으나 당선자가 평민당과의 사전 약속대로 평민당으로 입당함으로써 한겨레당은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으며 9월에 민중정당추진위원회와 통합되었다.

셋째,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부영, 유인태 등의 '민주연합파'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이다. 이들은 '범민주통합 수권정당추진회의'(통추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보수정당에 입당하였다.

넷째, 14대 총선에서 전국연합이 '민주대연합론'을 바탕으로 민주당과의 제휴를 도모하였지만 후보공천 또는 선거강령 합의가 여의치 않아 독자적으로 여섯명을 '민주후보'로 추천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다섯째, 김근태, 방용석, 김희선 등의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통일시대국민회의)의 95년 민주당 입당이다.

여섯째, 경실련 등 시민운동 출신 일부와 정치개혁시민연합(정개련)과 젊은 연대 그룹이 합쳐 장을병, 장기표, 성유보, 서경석, 이미경, 김홍신 등이 1995년 11월에 개혁신당을 결성하여 곧바로 민주당과 합당한 것이다.

일곱째, 1999년 3월에 창립된 국민정치연구회와 5월에 창립된 젊은 한국의 이재정, 유시춘, 이인영, 임종석 등이 새천년민주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양 조직의 회원 중 상당수가 창당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결합한 경우이다.

여덟째, 16대 대선을 앞두고 개혁적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시민 등이

개혁국민정당을 만들어 김원웅의원을 대표로 영입하여 노무현후보를 지지·지원하였으며 이후 열린우리당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정치의 개혁을 주장하며 참여한 정치세력화집단은 부분적인 정치개혁·정당개혁을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보스정치와 인맥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개혁은커녕 오히려 보스에 줄서기, 하위팀장화의 길을 걷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결과적으로 후진적이고 부패비리의 핵심고리라는 한국의 정당정치의 장식품 내지는 보조재 역할에 그친 측면이 크다. 개혁과 참여를 내걸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결합되어 있는 개혁정치세력은 이전의 정치세력화 그룹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는 대단한 용기와 깊은 신념이 없으면 꿈꾸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 군사정권 시절의 혁신당은 대부분이 관제 정당이었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구색에 불과하였다. 진보적인 정치세력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월민주항쟁의 성과로 대통령직선제가 재도입된 상황에서 재야 운동진영은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민중후보독자추대론 등으로 갈려서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 때 독자추대론으로 구성된 것이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와 백기완후보선거운동본부(백선본)이다. 이 세력들은 대선 후 부분통합과 분화(민중회의와 사추위는 민중정치연합 구성, 민정연은 다시 진보정치연합과 노진추와 노정연으로 분화)의 길을 걷게 된다.

둘째, 백선본의 소장파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정당 결성추진위원회(민추위)를 결성하여 '민중의 당'을 창당(1988.3)해서 13대 총선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5.16쿠데타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 실험이었다. 총선 후 자동 해산되어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재건위)로 재편되었다.

셋째, 재건위와 한겨레당이 통합하여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진정연)을 결성(1988.9)하고, 89년 11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진보정당준비모임)으로 전환하였다. 진보정당준비모임과 이부영 등 전민련 출신 인사들이 1990년 4월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를 출범시키고 이후 이부영 등 집행부 일부가 탈퇴한 다음 민중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거쳐 11월에 중앙당을 창당, 14대 총선에 참여하였다. 선거에 패배한 이후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이우재, 이재오, 김문수 등 핵심 당료들이 집권 여당에 투항하였다.

넷째, 민중운동진영은 15대 대선을 맞아 독자후보를 내기로 하고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등이 좌파그룹과 지식인그룹을 포괄하여 1997년 10월에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결성하여 권영길후보 선거대책본부를 꾸렸다. 민주진보 국민승리21은 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결성을 목표로 정치조직으로 활동을 전환하고 1999년 7월에 진보정당 결성을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국민승리21을 계승하여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이 창립되었는데 이는 민주노총 등의 대중조직과 이제까지의 진보적인 정치세력들 다수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민주노동당은 16대 총선에서 선전을 하였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으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8.1%의 득표를 하여 자민련을 앞서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16대 대선에서는 권영길후보가 재차 출마해서 95만표(3.9%)를 득표하는데 그치기는 하였지만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입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섯째, 국민승리21을 비판하며 결합하지 않았던 좌파 청년운동그룹이 1999년에 청년진보당을 결성하여 16대 총선에 참여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 당은 2001년에 반조선노동당, 반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사회당으로 재편하였으며 16대 대선에서는 김영규후보를 내세워 대선운동을 펼쳤다.

여섯째, 급진적인 환경운동의 한 그룹이 2002년 지방선거를 맞아 녹색당을 창립해 서울시장 선거 등에 참여하였으나 선거 후에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2002년에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민주노동당과 연합을 논의하였던 한국노총은 2003년에 장기표를 영입하여 사회민주당을 창립하였다.

여덟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민당과 녹색당이 통합하여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한국노총과 일부 환경운동의 정치적 연대체가 되었으나 총선 이후 자동 해산되었다.

아홉째, 2004년 4.15 17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 총 10명의 당선자를 내어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제도권에 진보 대 보수 축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또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민운동세력의 정치운동은 시민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져온 정치영역으로의 확장태이다. 16대 총선을 맞아 시민운동세력은 총선연대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모범사례가 된 낙천·낙선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국민들의 큰 지지 아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시민운동세력은 정치세력의 주체임을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았고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민운동은 16대 대선에서는 대선유권자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 시민을 묶어세워 선거에 참여시키는 한편 후보진영의 선거비용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시민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선 시민운동은 16대 대선 직후 여야 정당의원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개혁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17대 총선 직전에 최종 타결된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일단락되었다.[8] 17대 총선에서도 시민운동세력은 몇가지 갈래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낙천 낙선운동을 추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운동과 물갈이연대의 당선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단체들의 양성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의 국회 진출운동이다. 이 밖에도 일부 환경활동가들이 녹색사민당을 통해 추진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의회진출 시도도 있었다.

5.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1) 참여정부의 성격과 시대적 역할

참여정부는 참여와 개혁을 주 슬로건으로 하여 민주적인 리더십과 시스템적 관리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자주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을 표방하며 국정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계승, 성장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재벌개혁의지 모호, 시장주의적 교육정책과 노동유연화정책의 계승,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온존, 대북정책의 후퇴 등이 비판의 초점이 되었고 대통령의 '개혁 원칙의 결여와 철학의 빈곤'까지도 운위된 바 있다. 참여정부는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의 파트너적 협력정치(governance)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운동의 요구에는 국민적 기대의 통합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선별적인 고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자유주의 권력의 성격을 가지면서 큰 틀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9] 하지만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병폐를 조절하고 개

8) 2003년 1월 17일 참여연대, 민변, 문화연대 등 14개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정치개혁연대)를 결성하고 여야정당에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제안하여 각 정당의 개혁파들과 정치개혁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주요 시민단체들이 기성 정당들을 견이나여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정치개혁시민운동을 편 사례가 된다.

9) 노무현대통령은 5월 31일의 노사정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인은 신자유주의도 친노동도 아니며 균형

혁적인 특성을 가미시키고자 하고 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국가기간네트워크산업의 공익성 유지 등에서는 개혁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면이 강하다. 하지만 탄핵과 총선정국을 지난 지금 개혁방침이 파병문제, 재벌개혁, 아파트건설원가공개 등에서와 같이 흔들린다면 단순히 병폐만 조절하는 합리적 신자유주의적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노사모와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노무현정권은 시민적 민주주의적 권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 이 또한 탈색될 경우에는 시민적 권위주의적 권력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 민주화 이행과 관련한 대립구도는 개혁여부 수준을 뛰어넘어 내용적 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진보 대 보수 담론의 실천적인 일반화가 이룩될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이는 사회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에 보다 크게 달려 있는 부분이다.

참여정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조절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정세는 권력에게나 사회운동 진영에게나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참여정부는 미국의 패권주의 폭발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절하고 사회 제 부문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종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득권 세력과 총자본의 장벽과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와 정책수단을 가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재지지로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17대 총선[10]에서의 승리로 이제 여대야소의 2기를 맞은 참여정부는 그 형성의 기반인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가 기대했던 사회발전의 방향을 자신의 국정목표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추동체인 사회운동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정책을 조정하고 민주주의와 개혁정치를 이루어 미래지향의 민주적 구조개혁의 바탕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책으로는

첫째, 절차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포함한 부문별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여야 하며,

---

과 상생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정책과정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0) 17대 총선은 우리 정치에 큰 의미를 남겼다. 즉 진보당 이후 44년만에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점, 자유주의 의회권력을 창출한 점, 탄핵세력을 심판한 점, 상당수의 수구기득권보수세력을 심판한 점, 3 김시대를 종결한 점, 여성정치시대를 연 점, 여소야대와 세대교체를 이룬 점 등이다. 외국 언론들도 대부분 17대 총선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을 혁신세력 또는 급진진보세력의 의회진출로 꼽았으며 일부는 진보와 좌파의 의회 장악으로까지 과장하였다. 특히 르몽드는 17대 총선의 결과를 디지털 민주주의시대의 산물로 평가하였다.

둘째, 반개혁 대 개혁의 사회구도를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이끌어내서 보수와 진보의 요구를 시스템적 틀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며,

셋째 민중의 기본권과 생활권,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며,

넷째, 자주적이고 평등한 국제관계와 반전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여 자주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여야 하며,

다섯째, 한국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사회운동세력이 전반적인 정치세력화와 진보적인 정치조직화를 이루어서 한국정치의 진보적인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진보정치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진보정당을 육성할 수 있는 폭넓은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2)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과제

탄핵정국을 국민적으로 돌파하고 총선정국을 민주적으로 승화시킨 한국사회는 이제 민주화의 방향과 진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새롭게 형성된 보수 대 진보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재벌과 권력 중심의 발전패턴은 궁극적으로는 반민중적 독점자본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그 전제조건인 정치사회권력의 민주적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변혁과제를 교조적으로 제기하고 모험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개혁과제와의 연관 속에서, 개혁투쟁의 민주화 속에서 그리고 개혁과제의 변혁과제로의 전화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 개혁과제에 상응하는, 나아가 개혁과제로의 전화에 상응하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조직력의 강화라는 주체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개혁과제와 변혁과제의 변증법을 따라 전환기의 정세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권위주의와 수구보수주의를 혁파하고 보수적 민주화를 뛰어넘는 민주적 구조개혁이라고 하겠다.

민주적 구조개혁은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대안적 개혁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를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민주주의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 민주화와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연관지어 정치적 민주주의

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반대하고 시장경제의 무제한적 방임이 오히려 시장불균형과 시장파괴, 공황과 실업, 계급 간의 적대를 결과한다고 파악한다. 이 대안적 개혁은 따라서 시장적 조절보다 사회적 조절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조절의 확보, 사적 시장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영역과 공공성의 확대 및 이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의 강화, 이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제반 권리의 확보, 시민사회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의 확보 등이 핵심적 정책방향을 구성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화폐를 통한 재벌의 지배를 사회적 민주적 지배로써 제한하고 한국자본주의를 민주적·진보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민주변혁으로의 전화의 고리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운동은 정치사회의 진보와 보수 구도에 맞게 재편해 나가야 한다. 민중운동은 정치세력화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민중권력의 프로그램 하에서 한 차원 높은 진보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민운동은 개혁이니셔티브를 쥐고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의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이면서 진보적인 시민권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전체로는 시민·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가일층 확대하고 수구기득권적 보수세력의 반동을 막아내고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하여 민주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주체적 과제면에서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각자의 운동정체성의 문제와 일상적 운동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차이를 전체 운동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역동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객관적으로 총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총화지향적 사회운동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속력 강화보다는 민주성, 개혁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동목표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운동단체들 간에 상층부의 이해 심화와 저변 합의의 확대에 기초한 전술적인 공동목표를 민주적 구조개혁의 징검다리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목표의 설정과 총화지향적 사회운동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두 운동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채널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운동내외의 정세를 공유하고 문제인식의 기본틀을 서로 이해하고 공동목표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관련영역별 논의를 교차하여 수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앞으로의 진보적 정치세력

화 방침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으로 고민해 들어가야 하며 특히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보수정당의 개혁차원이 아닌 진보적인 정치조직화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주체적 내부과제는 먼저 민중운동은 민중운동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며 독자적 과제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며 영역, 접근방법 면에서 상대성을 가지면서 이 두 운동이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공동투쟁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동목표(강령), 실천방안, 실천행동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포괄적 다층적 민주주의 전선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진보적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전술을 공동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반제·반정부)운동을 통해 자연발생적 대응체제의 진화와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자본공세와 전쟁위기에 대한 공세적 전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세적 구조조정 반대론을 뛰어넘는 반신자유주의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조합주의와 분산적 정파대립을 극복함으로써 힘의 분산을 막고 유연성 제고와 사회적 컨센서스 확보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슈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구조개혁에 시민일반, 여성, 환경, 언론 등의 부문에서 개혁적 시민운동이 자리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공공지향의 개혁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시민운동적 개혁의 종합적 지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언론활동 중심보다 대중활동의 과제를 보다 폭넓게 수행하여 대중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과 사회발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운동과의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고 정치사회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정치적 독립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상호 침투하여 실천적인 진보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시민운동은 기존 제도의 민주적인 개선수준이 아니라 진보적인 패러다임으로의 개편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권력과 자본의 개혁을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사회운동의 당면과제는[11] 반전평화와 평화군축 체제의 구축, 이라크파병 철회, 한

11) 17대 총선 직후 네티즌과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즉 친일진상규명법

미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 제시와 올바른 남북관계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잘못된 과거의 청산 등의 정치사회적 과제들을 필두로 하여, 부패비리구조의 청산, 왜곡된 분배구조의 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성 제고와 공익화, 생활권 확보, 경제적 기본권 확보, 재벌개혁, 사회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경제 사회복지적 과제 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본권적 사회권 확대, 공공적 참여제도 획득, 집시법 정간물법 개정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확보, 생명인간 존중, 양성 평등, 지방분권과 자치, 소수자 기본권 확보 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과제에 포괄될 수 있다.[12]

개정,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기, 정기간행물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집시법 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라크파병 철회 등이다.

12) 김호기 교수는 탄핵정국 이후의 민주적인 개혁방향을 다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탄핵과 총선 정국을 통해 드러난 구시대적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의 개혁, 냉전 잔재들을 청산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만드는 것, 사회통합과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철폐와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정립 등이다. 김호기(2004), pp.8-9.

참고문헌

강남훈(1997), '지식인운동의 전개---교수들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학단협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1997.5. 당대.

교수7단체(2002), 2002년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2 대선 교수네트워크.

김상곤(1997), '정치사회운동으로서 5월운동의 평가와 계승',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상곤(1996), '5.18운동의 정치사회적 계승과 발전 전망', 전남사회연구회 등 심포지움, 5.18운동의 평가와 계승, 1996.5.16.

김상곤(2001), '권력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 개혁과 연대의 과제', 동향과 전망 2001년 가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김상곤(2002), '새로운 세기 한국사회운동의 발전조건과 과제',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

김상곤(2003),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과제', 6월 항쟁16주년 토론회, 2003.6.10.

김재홍(2003), '제4세대 신당의 대의명분', 주간오마이뉴스, 52호, 2003.5.9.

김호기(2004), '탄핵, 4.15총선과 민주개혁의 방향,'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국민 대토론회, 2004.6.1.

나간채 엮음,(1997), "광주민중 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노기연(2002),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현황과 과제" - 노기연 창립 1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민교협(1997), 월보 모음집.

민주노총(2002),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자에게 무엇을 남겼나?", 정책보고서 2002-11.

(사)참여사회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2001), "전환기의 한국사회,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송주명(2003), '한국의 지식인운동---민교협과 교수노조를 중심으로',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1", 문화과학사.

송주명(2004), '진보적 개혁과 민주주의,' 연대, 진보로의 전환 : 사회포럼 2004.

이회수(2002),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창간

호.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1988),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정기영·김윤철(2003), '한국정치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정치운동관련문헌해제".
전대화(2003),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연대와 전진:사회포럼 2003.
정영태(2002), '진보정당과 선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창간호.
정해구(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학단협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1997.5. 당대.
조현연(2002),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의 재편', "진보평론", 현장에서 미래를.
조희연(2002), '한국의 국가·제도정치의 변화와 사회운동', 한국사회포럼 ; 연대와 전진, 2002.2.7.
조희연(2003), '87년 이후의 수동혁명적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 : 맑스주의와 한국의 시민운동',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문화과학사.
학단협(1997),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I ,II". 당대
학단협(1999) ",5. 18은 끝났는가", 푸른숲.
기타 주요 시민,민중단체 홈페이지.

87년 항쟁, 2004년 총선과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진출과 민주개혁의 조건과 전망-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장)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87년 항쟁과 두 개의 민주주의 : '성공의 신화'화?
3. 87년 항쟁 이후 17년간의 한국정치
4. 2004년 17대 총선 : 87년 미완의 과제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5. 민주개혁의 조건과 전망
6. 맺는 글

1. 들어가는 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국가형성 시대와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이어져 온 한국현대사의 과정은 지배(블록)와 저항(블록)간의 대립과 충돌, 지배블록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분파의 변화로 점철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략 10여년을 주기로 한 정치적 위기가 반복되었으며, 그 위기의 해소 과정은 일종의 예방혁명적인 봉인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1987년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돌파(breakthrough)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이행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은 여러 국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다양한 층위에서 구체제의 민주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진통과 갈등과 투쟁이 전개된다(조현연 2002, 61~62).

이 글은 ① 1987년 항쟁의 의미를 17대 총선 결과와 연관하여 분석한 뒤, ② 17

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사회 민주개혁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2. 87년 항쟁과 두 개의 민주주의와 '성공의 신화'?

1987년 중반 대학가와 거리에서의 엄청난 시위와 저항의 물결은,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예상하는 데 충분했다. 그러나 6개월 후 한국의 정치상황은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시위의 물결은 가라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했던 구체제는 별다른 손상없이 단지 이름만 바뀐 얼굴들로 대체되었을 뿐이며, 또 그러한 결과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등등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었다. 사실 당시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급격한 국면의 전환은 가히 놀라운 결과였다. 특히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그 당혹감과 경악감의 절정이었다. 민선민간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며 자유주의 보수야당의 두 후보에게 투표했던 대다수 유권자들은 물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변혁을 통해 '새로운 민중시대의 개막'을 열고자 했던 이른바 '진보적 민중운동권' 역시 개별화된 투표행위가 만들어 낸 집합적인 정치적 결과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안티 클라이막스의 시점이자 정치적 쇠퇴의 출발점이 된 '역설적 전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87년 항쟁의 전 과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것이다. 우선, 두 개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다. 87년의 투쟁과정에서 표출된,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진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공통의 요구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최장집 1993, 184 참조). 즉 중산층의 요구 속에 함축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이와는 달리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요구 속에 함축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규범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내용적 실질화, 즉 불평등한 사회관계의 변경과

사회적 차별의 철폐,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6·29선언에서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중간층과 노동자계급의 분열, 양김씨의 분열, 지역적 분열 그리고 민중운동의 분열 등 연속적인 4차 분열 속에서 진행된 지역주의 정치의 고착화에 대한 것이다. 즉 1987년의 대선과 88년의 총선 이후 90년의 3당합당, 92년과 97년의 대선, 96년과 2000년의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이, 87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민주개혁이나 계급정치의 이슈는 예외없이 지역균열에 의해 중층 결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민주 대 반민주 또는 개혁 대 반개혁, 그리고 진보 대 보수라는 정치적 대립과 경쟁의 구도를 변질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산출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87년 항쟁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87년 항쟁을 둘러싼 '성공의 신화', 예컨대 이른바 '386세대'의 주축임을 자임한 사람들의 87년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지배블록 내부에서의 권력이동이자 군부독재의 합법적 재생산으로 종결된 87년 12월 16일의 13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변동의 수준을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정치적 결과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식의 민주화 경로가 바람직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상대적으로 지배질서의 안정성을 높여준 반면,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의제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균열과 모순구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회세력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조직화를 약화시켰다는 데 있다. 즉 민주화를 철저하게 반대한 세력에게는 최대한의 과실을 안겨준 것과는 달리 민주화를 주도한 민중세력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그리하여 민중정치-계급정치-진보정치는 초보적인 수준에서조차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고 만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패러독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3. 87년 항쟁 이후 17년간의 한국 정치

87년 항쟁에 따른 민주화 이행의 시대의 돌입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을 '정치'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것의 핵심적 특징은 지역주의 정치의 고착화 속에서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의 변형주의적 재편 및 '정치의 지체'와 '불임과 배반의 정치'의 지속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구체제의 지배블록에 의해 통제된 위로부터의 민주화라는 이행의 유형적 경로라는 것이 민중배제적인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 또는 '현상유지적 민주주의'(status-quo democracy)로 진행되었으며, 자유주의 정치권력인 이른바 '문민정부식 개혁'이나 '국민정부식 개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물론 민주적 이행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정치권력의 수립 속에서, 한국 사회는 국가의 억압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이 어느 정도 신장된 것은 사실이며, 또 군 내부의 정치적 사조직의 척결과 전·노 구속,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햇볕정책의 추진 등은 커다란 역사적 성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유리한 '편향성의 동원'의 제도화와 지역균열의 정치적 구조화 과정, 그리고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는 지배의 변형주의적 재편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나아가 자유주의 정치권력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적극적 수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퇴행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정부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87년 미완의 과제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지배의 변형주의적 재편과 '불임과 배반의 정치'와 '정치의 지체'

억압적 정치체제와 급속한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따라 모순과 갈등이 누적적으로 잉태되고 여기에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가세된 전환기적 시대 상황에서, 민주주의 이행 국면은 정치적 지배방식과 사회적 갈등의 규제 방식, 그리고 저항의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 민주주의 이행 경로와 과정을 살펴볼 때, 그 핵심 열쇠말 가운데 하나는, '변형주의적 재편을 통한 지배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에 의해 통제되던 기존의 제도정치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정치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당성의 획득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적 보수지배체제는 변형주의적 재편을 통한 지배의 재생산을 시도한다. 이 변형주의적

반영하지 못하고 후진적 구조에 고착되어 있음으로써, 시민사회 내의 계급계층적 대립, 다양한 새로운 갈등과 의견 분포를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성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들의 정치독점과 정치 카르텔이 시민사회와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소통 속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대의성을 상실한 '불구화된' 정치를 상징하며, 또한 기성의 정당체제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괴리된, 일종의 정치적 사익추구집단의 단기적 손익계산에 의한 이합집산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14].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퇴행화

한편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는 자유주의 정치권력은 '국가의 실패'를 명분으로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의 절대적 특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그리하여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인간세계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를 국가정책의 기본 기조로 수용하였다. 즉 민주정부를 자임한 민선민간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자본권력'의 봉사자로서 세계화에 매개된 '신자유주의적 성장제일주의'를, 경쟁력과 효율성을 앞세운 채 시장의 원리를 특권화한 시장근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변형적 재구성을 가속화시킨 것이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적극 추진이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것, 즉 한국의 경우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구체제의 '절차적인 민주주의'적 개혁과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속적 실현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 사회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지만, 그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거세게 불어닥친 것은 특히 1997년 IMF 관리체제 시기였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탈규제, 긴축재정 등 다양한 개념으로 상징되지만, 그 핵심적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자유주의의 극단화로서 시장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권위주의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문의 축소, 고용의 불안정, 비정규화, 소득불평등의 확대 등으

14)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조현연 · 조희연(2004) 참조.

재편을 통한 지배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지배의 재구성적 연속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통치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도입한 지배의 형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형주의적 재편이, '민주'정부를 자임한 민선민간정부의 현상유지적 타협 하에서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다원적 경쟁의 정치를 통한 '정치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만큼 보수독점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적 정치 대립의 격화와 갈등의 증폭 속에서 유지,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표출에 대해, 그것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정치란 것이 기본적으로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당이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표하며 이에 기반을 둔 대안을 조직하여 선거에 경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하는 민주주의의 중심적 정치기제"(최장집 2002, 207)라고 한다면, 노동자와 민중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 질서로 재편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독점의 정치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과 기성 정당들에게, 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영양실조에 걸린 민주주의'(underfed democracy)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며, 참여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의 반복적 악순환은 그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조현연 2003, 340). 그것은 보수독점의 정당체제가 존속함으로써, 계급적 분화의 가속화와 진보정당의 복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분출 등 시민사회의 급격한 변화와는 반비례적인 정치적 대표성의 격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형주의적 재편을 통해 온존, 강화되어 온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야말로 '정치의 지체'(political lag)에 따른 한국사회 발전의 병목 지점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13]. 결국 이 정치의 지체 현상은 변형주의적 재편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보수지배체제가 변화된 사회와 경제 현실을 제대로

13) 정치 지체에 따른 '대의의 대행'(proxy representation) 현상에 대해서는, 조현연 · 조희연(2001) 참조.

로 나타나게 된다.

자유주의 정치권력이 이 시장근본주의를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수용한 채 그것을 정책화하여 추진함으로써, 급기야 '20 대 80의 사회',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시장근본주의에 포획된 민주주의'와 '경제에 대한 정치 종속의 가속화'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에 따라 계급적대는 가일층 심화되었고 공공성의 영역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생활세계의 다양한 적대들의 표출도 격화되었다. 자유주의세력을 포함한 보수진영 일반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가적 수용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왔을 따름이며, 정치의 공공성 상실 및 정치의 사유화(privatization)에 따른 정치의 쇠락, 고비용 저효율 논리의 득세에 따른 민주정치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시장 자유·자본 자유의 극대화 및 노동 권리의 최소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축소와 위기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른바 '민주'정부 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공고화로 나아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이행'의 경로를 밟으며 탈민주주의화 추세와 '두 국민 프로젝트'의 진행 속에서 급격히 퇴락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2004년 17대 총선 : 87년 미완의 과제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탄핵정국이라는 격변의 정치상황에서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의 결과는 민주화 이후 17년에 대한 일종의 과거청산적 선택과 미래지향적 전망투표의 결합에 따른, '거대한 변화'와 '새로운 정치' 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대와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63.0%에 달하는 신진인사들의 대거 진출을 통한 대폭적인 물갈이와 정치권 세대교체, 그리고 39명에 달하는 이른바 '여풍'(女風) 등을 보면서 개혁과 변화의 징후를 읽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은 정치지형의 중요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일종의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첫째, 분할정부적 정치상황, 즉 행정부권력과 의회권력의 불일치 상황이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해소되었으며, 의회 지배세력의 교체 속에서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물론 이러한 분할정부적 이중권력 상

황의 해소는 참여정부의 개혁 실종과 실패를 과거처럼 기득권 수구세력에 의한 '포위된 개혁'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지역의 표 집중 현상을 볼 때 지역주의 정치의 해체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성과와 민주노동당의 성공, 민주당과 자민련의 참패는 오랫동안 민주정치의 발목을 잡아온 지역당 구조의 해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1950년대 진보당과 1960년 사회대중당의 출현 이래 진보정당이 최초로 의회 진출을 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가운데 특히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기성정치와는 그 질감을 달리하며 또 최상층의 이익에 일차적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기득 헤게모니 구조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정치란 보수 독점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변경시켜내고, 엘리트 특권을 특징으로 하는 기성 정당들과는 달리 진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내 민주화를 이룬 진보정당이 민주화 이행 이후 최초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것을 뜻한다. 또한 그것은 지역주의와 정치 부패,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인의 조직적, 집단적 등장을 말한다. 나아가 그것은 대중투쟁과 의정활동의 새로운 결합 모형의 창출 속에서, 운동의 정치로의 확장과 정치의 운동으로의 확장이라는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간의 쌍방향 소통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17년 전 87년 항쟁의 과제와 관련해서 볼 때,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회 진출은 87년 항쟁 당시 지연된 민주화에 따른 미완의 과제의 부분적 해소라는 의미와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개혁이라는 과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내용적 실질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진출과 성장이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면서 왜곡된 정치적 대표성의 원리를 바로잡고 계급적·민중적 의제가 정치 전면에 부상시킬 것이라는 점과, 그것을 통해 지역주의의 극복에도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지역주의 정치는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균열구조가 부상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비정상

적인 '초계급적 지역균열'을 계급적인 이익에 기초한 정상적인 '탈지역적 계급균열'로 변경시켜 낼 계기가 비로소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한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패러독스의 하나라고 앞서 지적한, 민중정치-계급정치-진보정치가 이제 대중적 검증을 통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균열과 모순구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적 비전과 전망의 창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5. 민주개혁의 조건과 전망

17대 총선 결과 민주개혁[15]의 '가능성의 공간'이 정치적으로 확장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17대 총선 직후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회 진출을 근거로 개혁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며,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긴밀한 협력이 17대 총선의 민의'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 + 1'이라는 '이중의 정치적 경쟁구도', 즉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경쟁구도와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경쟁구도의 기본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힘의 사회적, 정치적 역관계로 볼 때, 이러한 이중의 정치적 경쟁구도 가운데 지배적인 것은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 간에 형성된 불안정한 보수적 양강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민주개혁의 추동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우 그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복잡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할만한 통합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그 실체가 모호한 일종의 '잔여범주'로서의 정당이자, 기본

15) 여기서 민주개혁이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시스템과 관행과 구조 등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변경을 모색하는 개혁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자와 민중으로 표상되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적으로 민주개혁적 정체성이 빈곤한 정치집단의 반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부를 볼 때 민주개혁적 추진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흐름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도권을 장악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할 따름이다. 지난 1년간 주요 사안에 대한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보수적 정책 공조의 가시화가 바로 그 증거이며, 이것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자유주의적 '개혁' 정부·정당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보수'정부·정당으로 보는 이유인 것이다.

민주개혁을 둘러싼 두 당간의 차별성이라는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위치의 차이 말고는 이미지 정치의 수준에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이념과 정책의 수준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확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처럼 이념적 정체성이 빈곤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차별성이 없을 때, 이미지만을 무기로 한 차별화 경쟁은 적나라한 승리지상주의와 권력기회주의적 정치 행태의 전면화 속에서 갈등의 강도를 첨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형은 지난 시절 경험해본 것처럼 정쟁의 극단화에 따른 위기의 정치상황, 대표의 왜곡과 책임의 부재, 그리고 민주개혁의 실종과 파탄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16]. 2003년 '올해의 사자성어'에 대한 <교수신문>의 설문조사 순위 결과는 노무현 정부 1년의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말해준다. '우왕좌왕-점입가경-지리멸렬-아수라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것을 과거처럼 기득권 수구세력의 '포위된 개혁' 탓으로 돌리거나, 행정부를 지배하는 정당과 의회 다수를 갖는 정당이 상이한 이른바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이 정부를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분할정부 하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산적한 정치적 문제들의 중요한

16) 이러한 언급에 대해 노무현 정부나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 지지층들은 아마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은 '진보정치 100만표 시대의 개막'과 마찬가지로 오랜 '불임과 배반의 정치' 정치 계절을 마감할 민주개혁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그 기대치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을지언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 1년을 볼 때, 그것은 기대 이하였다. 역대 자유주의 정치권력 가운데 '자유주의 개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주의 정치권력의 미숙성과 허약성과 정치력의 한계를 가장 철저하게 노정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빚어냄으로써 실망과 기대의 좌절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단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 없는 참여정부'였다. 또 신자유주의적 성장제일주의 노선의 고수는 민생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절대 빈곤층의 양산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진 자들만의 사회'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형적인 종속적인 자주국방 노선의 추구와, 이라크 전쟁 지지 선언과 한국군 파병 및 추가파병 결정,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집착 속에서의 한반도 긴장 유지 등, 노무현 정부 1년은 평화의 추구가 아니라 위기와 긴장 조성의 1년이었다.

장애요인인 측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더 본질적인 데 있다. 노무현 정부의 표리부동과 '우향우'의 근본 원인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수구세력의 개혁 발목잡기가 아니라 뿌리가 허약한 '민주'정부의 '개혁성'의 한계, 사상적 결손과 정체성 빈곤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자 권력기회주의 집단으로서의 자기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즉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사망했다면 이는 타살이 아니라 자살"(손호철 2003)이자, "새로운 시대의 갈망에 대한 반역의 주체는 다름 아닌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 개혁과 자주 평화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김민웅 2003)이며, 민주화시대에 수구와 '개혁'은 겉으로는 현란하게 싸우지만 반노동적·반민중적 신자유주의에서는(홍세화 2003), 그리고 종속적인 한·미관계와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의 유지에서는 서로 멋진 공생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표피적인 '스펙타클의 정치'와 파격성의 전시효과의 연출, 숱한 모자이크식 로드맵(road map)의 작성이 일시적인 대중적 카타르시스 효과를 산출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탄핵정국과 총선 승리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또는 착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정부여당의 민주개혁적 실천의 부재 현상이—이념의 시대 종언과 실용주의적 노선 표방 속에서—17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는 데 있다. '김혁규 파동'은 그 하나의 증거이며, 지난 6월 5일 재·보선 결과가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견제 심리를 뛰어넘어 정부여당에 대한 전반적인 민심 이반의 양상까지 보이게 된 데에는, 17대 총선 이후에도 '새로운 정치의 첫차'가 아니라 '낡은 정치의 막차'라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한 심판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과거 보수적 개혁을 주장한 정당이 제1당이 된 적도 없지 않지만 열린우리당은 중도에 무게중심을 두되 진보적 개혁을 포괄하는 정당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됐"으며, 또 "열린우리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정당'이자 '혼성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성격이야말로 다양성과 복합성을 중시하는 21세기에 어울리며,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한 논자의 지적(김호기 2004)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한편 이중의 정치적 경쟁구도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갈등구도, 즉 이념적 스펙트럼상 '거대한 보수 대 거대한 소수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5월 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체결된 '그들만의 상생의 정치'인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협약'에서, 그리고 "국회가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야 하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라는 민주노동당의 질책을 들은 17대 국회의 파행적 개원과 운영에서 그 한 단면을 이미 드러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개혁의 중심 목표는 사회적 갈등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정당체제를 경쟁적으로 만듬으로써 정치를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있다. 그것은 정치적 대표성의 원리를 온당하게 구현하고 그에 걸맞는 정당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치적 책임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여야 대표간의 '상생협약'은 그 형식과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민주개혁의 원리나 목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구화된 상생의 정치이자 반쪽짜리 대화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제3당으로서의 진보야당에 대한 의도적 무시전략은 그들만의 약속을 통한 손쉬운 위험 회피전략의 구사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쟁의 정치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적 만남보다는, 비결정(non-decision)의 정치적 메카니즘의 작동을 통한 배제의 정치, 그것에 기반한 경쟁회피적 사고가 여전히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상생의 정치란 '새로운 질감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노동배제적 '양생의 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사안에 따라 연대도 가능하겠지만 심각한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협력과 제휴와 연대를 고려할 때 무원칙한 정당간의 기계적 연대가 아니라 민주개혁적 의제 중심의 사안별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나아가 그것은 민주개혁의 추진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실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소모적인 정쟁과 위기의 정치에 바탕한 '불임과 배반의 정치'를 '책임과 신뢰의 정치'로 변경시켜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추동해낼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가능

성을 지닌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이야말로 민주개혁과 계급적·민중적 의제의 설정 및 '다른 색깔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계급균열·분단균열·종속균열이라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역사적 균열구조에 파열구를 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6. 맺는 글

누군가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무기는 기억"이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온 자유주의 정치권력의 통치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고 또 기억해내야 할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등 자유주의 정치권력이 한결같은 구호는 '개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연이은 '강요된 죽음'과 절대 빈곤층의 양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공동체의 해체와 파괴는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거대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동맹'의 그물망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주요 구성원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한편 "대안세력의 담론적 실천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대안적 담론이 대중들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요소를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안적 담론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정영태 1999, 43)고 할 때,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회 진출로 표현된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균열과 성장은 이 두 측면에서 또는 어느 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독재의 정당성의 붕괴 그 자체가 아니라 대항 헤게모니의 조직, 즉 미래의 대안을 위한 집합적 프로젝트"(쉐보르스키 1995, 114)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 있는 정치적 대안의 집합적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대안정치의 집합적 프로젝트를 현실세계에서 확산시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비개혁주의적 개혁'(nonreformist reform),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진되는 제도개혁이지만 그 누적적 효과가 자본주의 계급질서와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개혁(조돈문 2004 참조)의 구체화, 풍부화를 의미한다.

17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그에 걸맞는 역할의 확장적 변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민주노동당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기성 보수정치와 의회정치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효과야말로 예상되는 우울한 정치상황을 변경시켜낼 주요 변수이며, 그것은 이미 낡은 정당정치의 관행 및 시스템과 의회의 시대착오적 특권 타파 시도에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효과는 한 논자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에 유령처럼 배회해 온 '좌경화의 위협'이라는 '잘못된 신화'를 파괴하면서, 우리 사회 문제의 근원은 좌경화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우경화'였다(이광호 2004)는 비밀 아닌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대표하지 못한 소외의 영역이 '10 대 90의 사회'화 속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 상실의 공간을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탈정치화 추세를 바꿔내고, 사회적 힘관계의 중심을 보다 왼쪽으로 이동시켜내야 한다. 이것은 보수적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 대안 헤게모니의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수행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민주노동당이 담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의 몫을 더욱 무겁게 한다고 할 것이다. 이념과 정책경쟁을 통해 '수구적 보수세력의 신속한 퇴출,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의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으로의 변신을 강제하는 정치적 자극과 압박,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진보주의세력의 경쟁구도'를 형성시켜내고 그것에 기초해 정상적인 정치의 장을 열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실천 여하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민주노동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보수화 속도나 또는 개혁으로의 방향 전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것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역사적 반동의 힘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또 제도화 과정에 내재해 있는 이른바 '길들이기 효과'에의 순응과 안주는 낡은 정치 타파와 새로운 대안 정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역사적 대장정의 한 순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력을 갖추자'는 말로 요약되며, 그

것은 '계급적 프로젝트'를 정치적 실천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보수성을 극복하는 '국민적 프로젝트'의 실천 또한 함께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이중적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병행적 실천, 그것을 통한 사회적 기반의 확장과 대중적 지지의 확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 어느 한 쪽의 배제 속에서 다른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또는 양자택일식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편향적 실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야당'을 자임한 민주노동당에게는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실천의 모범을 보이면서 의회와 국가권력에 대한 책임있는 감시자 역할과 함께 새로운 의제 설정자의 역할을 통해 17대 국회 및 의정활동의 환골탈태를 압박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나아가 '진보적 대안정당', '대안적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따른 총체적인 사회적 파탄과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가 횡행하는 '무장한 세계화'라는 이 야만과 광기의 시대를 넘어설 대안적 정치 패러다임과 새로운 역사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적 노선이 자신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날카로운 비판과 설득력 있는 대안의 무기로 영향력을 확산할 가능성은, 새로운 역사적 비전의 창출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다. 즉 각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얼마나 폭넓게 대중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응집시켜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대적,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상이나 노선은 지배의 논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적 저항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예컨대 항상 '지식인의 사고'로만 머물면서도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로만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주장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될 뿐 대중의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진보운동의 정치적 구심을 자임한 민주노동당이 '당다운 당'으로서 자기 재정립을 통해 대중적 정치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선이나 차악의 정치'에 발목이 잡혀있는 대중들을 '최선의 정치'의 길로 방향 선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면 핵심과제로서 이른바 'NL 대 PD'라는 자기파멸적인 20세기형 낡은 정파적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정치의 패러다임을 창출

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성의 보수정치가 결코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창출해낼 수 없다고 할 때, 이 과제 해결의 성패야말로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표방한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내면서 '또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현대사와의 열려진 대화, 특히 지나온 운동의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진지한 성찰 속에서, 또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 및 그것이 부과하는 새로운 과제와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그리고 생활현장 및 생산현장과의 끊임없는 쌍방향 소통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 속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풍부히 하는 가운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보수의 새로운 재편과 진보의 성공적 등장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 즉 민주개혁에 대한 대중적 열망의 다른 정치적 표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제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두 가지 선택, 즉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상징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흐름과, 진보정치 100만표 시대의 개막과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회 진출로 상징되는 '새로운' 진보의 흐름 가운데 어느 것이 과연 기득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힘이 될 것이냐에 따라 민주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수준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물론 선험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서로 다른 흐름의 상호 경쟁의 과정 속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민웅. 2003. "반동과 퇴행을 청산할 새로운 혁명을 꿈꾸며". <프레시안>. 12월 31일.
김호기. 2004. "성찰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라". <경향신문>. 6월 2일자.
손호철. 2003. "노무현 정부의 '개혁사망'은 타살 아닌 자살". <오마이뉴스>. 11월 4일.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1995. "이행의 게임". 임현진 · 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이광호. 2004. "문제는 '좌경화' 아닌 '우경화'". <한겨레신문>. 5월 7일자.

정영태. 1999. "논평-담론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가을호.

조돈문. 2004.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5월 7일.

조현연. 2002.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의 재편". 『진보평론』. 봄호(11호).

조현연. 2003. "'자유민주주의' 지배담론의 역사적 궤적과 지배 효과".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조현연 · 조희연. 2001. "민주주의 이행 시대의 시민사회와 운동정치".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집.

조현연 · 조희연. 2004. "한국사회 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의 변형적 재편". 『한국사회포럼 2004(제3차) 발표 자료집』. 2월 13일~15일.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홍세화. 2003. "민주화된 시대". <한겨레신문>. 11월 17일자.